법령Ⅰ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대상자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주무부장관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61세의 의사 甲

② 미국의 법령에 따른 화학류관리 기술자격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인 19세의 乙

③ 일본의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여 취업준비 중인 대한민국 국민인 40세의 물리학자 丙

④ 호주로부터 동물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丁

문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권한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중 해당 부령으로 정하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

ㄴ. 주무부장관이 직접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가 작성한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

ㄷ.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 중점관리대상물자 소유자에 대한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 권한

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비축물자의 사용에 관한 권한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업체에 대한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개 부처 이상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다.

②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어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된 자에게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지정 당시에 미리 그 참여에 동의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중점관리대상물자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가 그 물자에 부착된 지정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하여 그 효용을 훼손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정부 비축 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상황 등 비축에 관한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문 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주무부장관이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에게 물자의 수리에 필요한 시설의 보강을 명하는 경우

ㄴ. 주무부장관이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로서 물자를 생산하는 업체의 장에게 기술의 개발을 명하는 경우

ㄷ.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부 비축 물자가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 비축을 해제하려는 경우

ㄹ. 주무부장관이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에게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의 비축을 명하는 경우

ㅁ.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업체 비축 물자가 더욱 우수한 대체품의 개발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 비축을 해제하려는 경우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ㄹ, ㅁ　　④ ㄱ, ㄷ, ㄹ, ㅁ

문 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상 훈련과 다른 훈련 등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상 동시관리훈련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상 물적자원훈련
㉢ 인력자원 대상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훈련
㉤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① ㉠은 ㉤보다 우선한다.
② ㉡은 ㉣보다 우선한다.
③ ㉡은 ㉤보다 우선한다.
④ ㉢은 ㉠보다 우선한다.

문 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실시명령 및 훈련통지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 시·도지사등은 훈련통지서를 인력훈련통지서 또는 물적자원훈련통지서로 구분하여 발부한다.
ㄴ. 본인을 대신하여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업체의 임원이 해당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을 제때에 하지 않고 늦게 한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다.
ㄷ.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 인력훈련통지서는 그 교부기간을 줄일 수 있으나 물적자원훈련통지서의 교부기간은 줄일 수 없다.
ㄹ. 동시관리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등은 훈련대상자의 거주지가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의 교부 결과를 지체 없이 훈련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문 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상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훈련대상물자가 특허권인 경우 물적자원의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지정된 날까지 훈련통지서에 지정된 사람에게 문서를 지참하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훈련대상물자인 동산의 소유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경우 훈련통지서에 적힌 바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물자를 지정된 사람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③ 동시관리훈련의 경우 물적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다.

④ 자가전기통신설비와 이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하여 동시관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문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동시관리훈련인 경우 훈련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숙박료·교통비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훈련대상물자의 사용료와 그 밖의 보상은 훈련 개시 당시의 과세표준율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전기통신설비의 사용료는 전신전화요금표를 기준으로 한다.

③ 훈련에 제출된 물자가 훈련으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훈련대상물자가 훈련으로 인하여 유실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문 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인력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직계 존속의 위독으로 본인이 아니면 그 간호를 하기 어려워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은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으로 훈련대상 업체가 휴업하여 훈련에 응할 수 없는 경우,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물적자원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ㄷ.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훈련에 참가한 경우 그 기간을 휴무로 할 수 있다.

ㄹ. 훈련실시대상은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인력·물자 및 업체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0.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앙민방위협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법제처장은 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의안 정리, 그 밖의 일반서무는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이를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2명을 두며, 간사는 중앙민방위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ㄷ.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맡되, 2개 이상의 분과위원장을 겸할 수 없다.
ㄹ.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및 관계 부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문 11.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을 제외하고,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장비를 비치·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건축물의 점유자에게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備置) 및 정비를 명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지하 양수시설의 설치와 정비를 명할 수 있고, 그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지역에 출입하여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방위 준비를 위해 소방과 방공 장비를 비치할 경우 그 위치와 활용 방법을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따른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화생방을 대비하고 의료와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시설 및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관계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 12.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6개월 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는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된다.
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려면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ㄷ.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는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제외된 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한다.
ㄹ. 지역 민방위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의 주소지인 통·리의 구역외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직장 민방위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의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또는 다른 직장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에 의한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ㅁ. 지원에 의하여 지역 민방위 대원이 된 자가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문 1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종합대학인 A대학은 직장 민방위대를 두고, 그 총장은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인 甲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하였다. 민방위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이 예비군대원인 경우에는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없다.
② A대학의 학생은 그 입학일부터 6년이 지나면 A대학 직장 민방위대에 편성된다.
③ 甲은 주민등록표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 대상자를 민방위대에 편성할 수 있다.
④ 甲은 직장 민방위대를 이전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직장 민방위대 대원 甲이 재해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甲의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ㄴ. 지역 민방위대 대원 乙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이나 전자문서로 송달하려면 미리 乙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ㄷ. 민방위기술지원대 대원 丙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경우, 丙은 관할 읍·면·동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ㄹ. 직장 민방위대 대원 丁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는 관할 읍·면·동장이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군 B면에 ㉠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생기자 민방위를 위하여 ㉡ 필요한 응급조치가 취해졌다. 한편, ㉢ 민방위대의 동원 명령을 받은 지역 민방위대 대원 甲은 ㉣ 관혼상제(冠婚喪祭)를 이유로 동원을 미루고자 한다.

①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에 해당한다.
② A군의 군수가 ㉡을 명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B면의 면장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직접 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B면의 면장은 관할 민방위 대장에게 ㉢을 내릴 수 있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A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B면의 면장은 ㉣을 이유로 甲의 동원을 직권으로 미룰 수 있다.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은 2018. 1. 17. 민방위대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 甲은 치료를 받기 위해 치료 신청을 하였으며 그 부상의 치료로 인해 750일 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다. 한편, 甲은 위 임무를 수행하면서 사용 당시 시가 3천만 원인 자신의 중장비를 사용하였다.

<보 기>

ㄱ. 甲이 동원에 사용한 중장비의 연간 사용료는 300만 원으로 한다.
ㄴ. 甲이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의 신청서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ㄷ.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이 최근 5년간 10만 원으로 변동이 없다면, 甲이 지급받을 수 있는 휴업 보상금은 7천 5백만 원이다.
ㄹ. 甲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甲에게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상 甲～丙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상한을 옳게 비교한 것은?

○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이 설치한 대피호 안내표지판을 제거하였으며 과태료의 가중사유가 있고 감경사유는 없는 경우 ○ 직장 민방위 대장인 乙이 직장 민방위대의 명의를 변경하였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과태료의 가중사유가 있고 감경사유는 없는 경우 ○ 丙이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과태료의 가중사유가 있고 감경사유는 없는 경우

① 甲 > 乙 > 丙 ② 甲 = 乙 = 丙
③ 乙 = 丙 > 甲 ④ 丙 = 甲 > 乙

문 18. 「민방위기본법」상 민방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 계획은 국무총리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집행 계획은 중앙관서의 장이 기본 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시·도계획은 시·도지사가 집행 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군·구 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시·군·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19.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대원의 명부(名簿)를 전산자료로 관리하고 예비군 편성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야 한다.

ㄴ. 중대 규모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할 수 없다.

ㄷ. 지역예비군은 거주지를 단위로 하여 연대·대대·중대·소대·분대로 편성하고, 연대·대대·중대는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ㄹ. 소속 기관장이 인사명령서를 보낼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문서 송수신 체계에 따라 보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 20. 예비군법령상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때에는 전출목적, 전출지 및 전출일을 적은 신고서를 거주지 이전 후 신거주지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국방부장관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ㄷ.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거나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ㄹ. 국방부장관은 동원 보류대상자가 아닌 예비군대원이 동원명령 발령 지역 및 인접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에 있는 경우에는 동원명령 발령 후 6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령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21. 甲～丁은 각각 수임군부대의 장으로서 예비군대원 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려고 한다. 예비군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은 「예비군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훈련 소집일 5일 전에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였다.
ㄴ. 乙은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이나 점검을 하고자 사전 동의 없이 문자메시지의 방법으로 예비군대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였다.
ㄷ. 丙은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었기 때문에 직장 동료가 예비군대원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임을 확인한 후 수령에 관한 동의 없이 바로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였다.
ㄹ. 丁은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전자우편주소와 수신·발신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하였고, 이에 훈련 일정도 전자문서로만 전달하였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문 22. 예비군법령상 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비군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무장을 할 수 있으나,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을 위해서는 무장을 할 수 없다.

② 군부대의 장이 경찰서장에게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 경우에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군부대의 장이다.

③ 예비군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무장을 위한 무기·탄약·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의 임무를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이를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에 있어, 예비군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문 23. 2020. 3. 12. A지역에 무장공비가 침투하였다. 무장공비를 고립시키기 위해 전술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수탁경찰서장 甲은 주민의 피난 명령 및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주민들의 재산을 제거하는 조치를 하려고 한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이 A지역 주민의 재산을 긴급하게 제거하기 위해 그 내용·기간·구역 등을 주민에게 통지 및 게시하였더라도, 재산을 제거당하는 본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ㄴ. 甲이 주민의 재산을 제거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휘 계통에 따라 그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ㄷ. 甲이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A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乙을 검문하여 시간이 지체됨으로써 乙이 손해를 입었다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ㄹ. 재산을 제거당하여 손실을 입은 주민 丙이 보상금 지급을 2020. 4. 7. 신청하였고, 며칠 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이 결정된 경우,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丙은 2020. 5. 7.까지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문 24.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甲은 지역예비군으로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되었다.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훈련 중이던 甲은 2017. 10. 1.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위해 30개월 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줄곧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다. 甲의 부상 정도를 고려할 때, 「군인연금법」상 甲의 전역 당시 계급 및 호봉과 같은 현역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장애보상금은 6,000만 원이고, 병(兵)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장애보상금은 5,000만 원이다.

① 甲은 6,000만 원을 장애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② 甲은 장애보상금 5,000만 원뿐만 아니라 휴업 보상금을 재해보상금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다.
③ 甲은 24개월을 한도로 하여 결정된 휴업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④ 甲이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그 상이(傷痍)로 인해 사망한 경우, 甲이 받는 사망보상금에서 장애보상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문 25.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이던 A군부대 소속 예비군대원 甲은 응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하였다. 그런데 인근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인 B병원(병원장 乙)에서 치료를 받았고, 甲은 치료비를 모두 지급하고 퇴원하였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乙은 A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甲에 대한 치료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국가는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관할 군사령관이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치료비 지급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甲에게 치료비 지급 통지를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④ 甲이 퇴원 후 부상 후유증으로 3일을 초과하여 계속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乙은 A군부대의 장에게 요청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甲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 26. 甲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훈련을 받고 있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의 사용자가 甲이 훈련을 받은 날을 정당한 사유 없이 휴무로 처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甲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甲이 훈련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그 가족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자가 된다.
ㄹ. 훈련 중 부상당한 甲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장이 발급한 부상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주관기관과 재난 및 사고의 유형 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해양수산부 –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ㄴ. 행정안전부 –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ㄷ. 산업통상자원부 –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
ㄹ. 환경부 – 조류(藻類) 대발생(적조에 한정)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앙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ㄴ.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ㄷ.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중앙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ㄹ.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대책본부를 두고, 중앙대책본부에 본부장과 차장을 둔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 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건의하는 경우에만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 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이 경우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다.

문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인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긴급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가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행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라도 사전에 서면으로 알린 후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 31. 행정안전부장관 甲은 乙이 시장으로 재직하는 A시에 코로나19의 대규모 지역감염 발생으로 극심한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이 재난사태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乙의 건의를 받아야 한다.

② 甲은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통보만 하면 된다.

③ 乙이 재난사태가 선포된 A시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를 하려면 甲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甲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문 32. A도 B군 긴급구조통제단장 甲은 관내 지역에 표면적 100 ha에 달하는 산불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자 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인 A도 소방본부의 장 乙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긴급구조활동을 재난현장에서 지휘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은 치안에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ㄴ. 甲이 지명하는 자가 B군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를 한다.
ㄷ. 甲은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면현장 지휘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결과는 乙이 B군의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단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ㄷ.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복구사업의 지도·점검을 하려는 경우 지도·점검의 목적, 일시 및 대상을 포함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 7일 전까지 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ㄴ.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의 해당 연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ㄷ.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0 이상의 금액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ㄹ.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과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에서 제외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난 관련 보험등의 보상한도액의 기준은,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또는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② 재난 관련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는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이며,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자이다.
③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의 경우, 재난 관련 보험등 가입 의무자는 그 도서관에 대한 허가등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설의 재난 관련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재난 관련 보험・공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회계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난 관련 보험・공제 사업결산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Ⅰ - 헌법

문 1.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직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③ 정당해산심판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④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문 2.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학교시설을 요구할 수 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② 청소년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로서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④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가 내려졌을 경우 그 조치가 적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가해학생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는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 3.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헌법은 4년 임기의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다.

② 1952년 제1차 개정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직선제로 선출하였고 국회를 양원제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③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당해산심판을 담당하도록 규정하였다.

④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문 4.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없다.

② 위헌법률심판제청서에는 당해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피고인의 구속여부는 기재하여야 하나 구속기간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③ 제청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후에도 심판에 필요한 의견서나 자료 등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으나, 당해사건의 참가인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다.

④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법원이 기각결정의 대상으로도 삼지 않은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법원이 당해 조항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였다면 이러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적법하다.

문 5.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민투표법」상 투표운동은 주민투표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데, 해당 지방의회의원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조례제정·개폐청구권은 헌법 제37조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그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③ 지방선거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법률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다른 행정주체에게 위임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있으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문 6.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방송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단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의견 및 정보를 표현, 전파하는 주관적인 자유권 영역 외에 그 자체만으로 실현될 수 없고 그 실현과 행사를 위해 실체적, 조직적, 절차적 형성 및 구체화를 필요로 하는 객관적 규범질서의 영역이 존재한다.

②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사상 내지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가 포함되고 전파의 자유에는 보급의 자유가 포함된다.

③ 사전허가금지의 대상은 언론·출판 자유의 내재적 본질인 표현의 내용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언론·출판을 위해 필요한 물적 시설이나 언론기업의 주체인 기업인으로서의 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④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직업수행의 자유에 있어서도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이 아니다.

문 7.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즉시항고기간을 3일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즉시항고 제도를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권리로서만 기능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항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②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모든 사건에 대해 상소법원의 구성 법관에 의한, 상소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포함된다.

③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을 상소심법원이 아닌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하도록 한 것은 입법자의 재량권을 벗어나 소송구조 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④ 소취하간주의 경우는 실질적인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원고를 패소자로 보고 변호사보수가 산입된 소송비용을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원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문 8. 국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투표권과 선거권은 모두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직접적인 참정권이다.

②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므로, 국민투표권자의 범위는 대통령 선거권자·국회의원선거권자와 일치되어야 한다.

③ 사립초등학교 교사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없으나, 국립대학교 교수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할 수 있다.

④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문 9. 국회 교섭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가 외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그 내부조직을 할 수 있는 권능, 즉 국회의 기관인 국회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하고 그 궐위시에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국회의장·부의장의 사임을 처리하며, 필요할 때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그 직원을 임면하고 교섭단체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등은 모두 자율적인 국회내부의 조직구성행위이다.

②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의석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배분·지급한다.

③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과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 국회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문 10.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당의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에서 탈락하고 본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②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를 뜻하는데, 그 범위에는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청구권도 포함된다.

③ 「민법」이 유언이나 기여분 제도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의사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여부 등을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장치를 이미 마련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민법」상 상속결격사유 조항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다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청산·분배하는 재산권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혼배우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문 11. 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담금은 국가 등이 제공하는 특정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되는 것으로, 부담금과 관련된 공적 과제의 수행으로부터 납부의무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②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은 추구되는 공적 과제가 부담금 수입의 지출 단계에서 비로소 실현된다고 한다면,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은 추구되는 공적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가 부담금의 부과 단계에서 이미 실현된다고 할 것이다.

③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어떤 공과금이 조세인지 아니면 부담금인지는 법률에서 그것을 무엇으로 성격 규정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그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문 12.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파산절차 중 '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직무감독에 관한 사항'은 사법의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므로 입법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감독에 관한 법원의 권한을 조정하는 입법을 할 수 없다.

③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④ 시·군법원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 사건을 관할한다.

문 13.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여 정부에 이송하면 대통령은 5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이 개정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상임위원회 중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다.

④ 국회의원이 궐원되었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문 14.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② 법규명령은 행정규칙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③ 삼권분립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 하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행정입법의 제정이 법률의 집행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④ 행정입법의 지체가 위법으로 되어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우선 행정청에게 시행명령을 제정·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제정·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

문 15.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보상은 과실책임의 원리에 의하여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형사사법기관의 고의·과실을 따져 형사보상청구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② 형사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그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형사보상청구의 기간은 재판상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기간으로서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③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데, 대리인을 통하여는 할 수 없다.

④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고, 사망한 자에 대하여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